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 들은 새 정부 교육 공약 흔들기를 즉각 멈추십시오”

- 주관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일시 : 2017. 6. 28.(수)
- 장소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은 새 정부 교육 공약 흔들기를 즉각 멈추십시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월 28일(수) 10시에 서울교육청 정문 앞에서 자사고 학부모들의 교육공약 흔들기 관련 비판 기자회견을 개최함.
- ▲ 지난 6월 21일 이후 자사고 학부모 등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관련 공약 폐기 시위를 시작함. 이는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리얼미터 조사 찬성 53%, 반대 27%)와 배치되는 명분 없는 일임.
- ▲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은 얼마 전 3,500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단체가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 1순위 차지.
- ▲ 2016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4.1만원, 고등학생 26.2만원, 중학생 27.5만원, 즉 중학교 사교육비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외고 과학교 영재고 자사고 입시 등이 중학교 사교육비 폭증 원인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임.
- ▲ 당사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외고 과교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나, 우리 단체가 몇 해 전 조사한 자사고의 ‘교육 다양성’ 평가 결과에 의하면, 20개 자사고들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든 자사고들은 낙제점을 받았음.
- ▲ 특목고인 외고의 경우도,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는 외고생들에게만 가르칠 특수능력이 아닌 모든 고교생들에게 가르쳐야할 일반능력이며, 더욱이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은 4차 산업 혁명 시대 구글 번역기 등장으로 그 존재 의의를 잃어버린 상태.
- ▲ 외고 자사고 등 소위 ‘특권 고교’들처럼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 교육’ 학교 체제는 사회통합 질서에 역행하고, 이질적 집단 속에서 협업 능력을 길러내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함.
- ▲ 따라서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교, 영재고 등의 서열화된 고교체제는 고교입시 경쟁과 사교육비 격화 및 국제적 흐름의 미래 학교체제에 맞지 않는 퇴행적 질서로 그 수명이 다했고, 이를 즉시 해소하는 전면적 정책 수정이 필요함.
- ▲ 자사고 학부모등 이해 집단들도 국민 지지가 높은 새 정부의 자사고 관련 정책을 수용해야함. 만일 계속 반대할 경우, 국민들의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촛불 행동의 반대에 직면할 것임. 자기 권리 쟁취는 국민의 보편적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가 있음.

- ▲ 문재인 정부와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는 이해 집단의 반발에 국민 여망을 저버리지 않아야함. 이익 집단들의 반발로 교실 수업의 혁명과 사교육 부담 해소라는 대의가 어그러지면 촛불 민심이 문대통령을 선택한 의미가 퇴색하는 것임.
- ▲ 17개 시도교육감들 역시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을 의식해 현 정부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함. 자사고 외교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교육감들은 내년 지방 선거 때 국민적 지지를 잃게 될 것임.
- ▲ 우리 단체는 이번 기자회견을 출발로 외교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국민 행동에 돌입해서, 자사고 외교의 일반고 전환을 기필코 성사시킬 것임.

지난 6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장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교육공약인 '자사고 외교의 일반고 전환' 관련된 공약을 폐기하라는 대대적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약이야말로 고교 입시 경쟁과 사교육 고통에 빠져 신음하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을 지켜낼 핵심 정책임을 직시하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자사고 학부모들과 정부, 교육감들에게 우리의 준엄한 뜻을 전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사고 외교의 일반고 전환 공약에 이해 당사자들은 반발하지만, 국민 여론에 대한 지지율은 높습니다. 리얼미터가 6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자사고 폐지 찬성 국민 53%, 반대 국민 27%)가 그렇고, 얼마 전 3,500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단체가 실시한 '교육공약 우선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 1순위 희망 공약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때 대부분의 정당 대선 후보들이 '자사고 외교의 일반고 전환, 혹은 폐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즉, 자사고 외교의 일반고 전환은 이제 시대적 대세가 되었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국민들이 자사고 외교의 일반고 전환을 강렬하게 열망하는 것입니까? 과거 20년 전 외교 자사고가 없던 시절, 중학교는 사교육의 무풍지대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았고 중학생들은 초등학생들보다 사교육비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1994년 외교,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들어서고, 2008년 자사고가 들어서면서 고입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뛰어 2016년 작년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생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 24.1만원, 고등학생 26.2만원, 중학생 27.5만원, 즉 중학교 사교육비가 최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중학생들에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 지옥 같은 중학교 사교육 증가의 뇌관이 특권 고교 입시 경쟁에 있다는 것을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고교 입시의 다단계 전형을 생각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이것만큼 불공정한 일도 없습니다. 영재고부터 중 3생들을 뽑고 남은 학생들을 자사고/특목고가 골라가더니, 자율고/ 특성화고/ 과학 중점고를 거쳐 마지막에 남은 학생들이 일반고로 배정되는 것이 지금의 고입 전형입니다. 마치 석유에서 가스를 뽑고 휘발유, 중유를 뽑은 후 최종 찌꺼기로 아스팔트를 만드는 순서와 같습니다. 아무리 SKY대 중심 대학체제지만, 대학입시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 대학입시를 고교입시처럼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공정한 고입전형은 방치되고 있으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런 불공정한 고입 다단계 입시 경쟁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그 중학생들에게 자유란 없습니다. 중학생이 되는 순간부터 부모는 이 경쟁 사회에서 자식이 떠밀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아이의 목줄을 잡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일은 뒤로 미루고, 꿈과 꿈 사이를 오고가며 탐색과 방황을 하는 기회를 봉쇄하고, 네가 장차 어떤 길로 갈 것인지 그것을 모를지라도, 어떤 꿈이든 결정하라고 재촉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떤 길로 갈 것인지를 어찌 알 것이며, 곧 또 무너질 꿈을 불드는 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서 남이 강요한 의존적 삶을 받아들입니다. 남이 요구하는 공부 시간표에 휘둘려 학습의 자립심이 무너집니다. 나 혼자 힘으로 저 입시 경쟁의 파도를 넘을 수 없다 생각하니, 학원에 자신을 의탁하게 되고 그 결과 스스로가 문제를 찾고 예상하고 홀로 자기 삶을 우뚝 세우는 능력이 결핍되었습니다. 또한 초중고 12년간 그런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 대학은 물론이요 직업세계에 들어가서 마저도 스스로가 문제를 찾아내고 예상하는 능력이 없는 허약한 존재, 글로벌 경쟁에 하등 경쟁력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들은 SKY대 출신인데 기업을 맡길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존재들이 수두룩하다고 개탄합니다. 이것이 소위 이 나라 인재들의 실상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 자사고와 특목고 같은 학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단체가 몇 년 전 자사고가 얼마나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놀랍게도 20개 자사고들 중 1개를 제외하고 모든 자사고들은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대신 국가가 준 자율권을 남용하여 일반고는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국영수 교과 중심 입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교를 만들고 다단계 입시체제를 붙여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라고 했더니, 교육과정은 획일화되고 입시 명문고로 전략해 버렸으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소위 특수목적고인 외고도 문제입니다. 과연 특목고라는 이름으로 일부 학생들에게만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온당합니까? 영어 중국어가 일반고 학생들도 모두 습득해야할 일반 능력이지 과연 외고생들만 추구해야할 특수 능력입니까? 아니 외국어고는 더 근본적인 비판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지금은, 구글 번역기 등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통번역사 같은 외국어 관련 직업이 사라질 판인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대학조차 외국어 관련 학과가 사라지고 '외국어대' 라는 이름의 간판도 내리려는 고민을 하는 시대에, 외고만 버티면서 특수목적고라 인정받을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라 인재들을 그렇게 미래 사회에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심각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 특권 고교들은 소위 성적과 부모 배경이 비슷한 아이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분리 교육' 기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라도 고교 단위에서 이런 방식의 분리교육을 보편화시킨 나라는 없습니다. 다양한 아이들이 뒤섞인 가운데 '소통' 하는 교육은 '사회 통합'의 핵심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통'은 미래 능력이기도 합니다. 2010년 OECD 보고서는 미래 능력의 하나로 '이질적 집단 속 소통 능력'을 꼽았습니다. 세상이 글로벌화되고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 가서 나와 다른 현지인들에게 자동차를 팔고 TV를 팔아야하는 시대입니다. 국내 이질적인 집단에서 교육받아봐야 이질적인 외국에 나가서도 비즈니스를 할 수 있습니다. 성적과 부모의 직업, 아파트 평수가 같은 아이들끼리의 분리교육에 익숙하게 되면, 직업세계의 이질성에 당황하고 도태됩니다. 그러니 분리 교육 고교 체제를 빨리 해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답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자사고 외고 입시제도의 변화를 넘어, 지금의 이수직적 고교서열체제 자체를 해소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과는 무관하게, 오히려 대학입시를 위한 획일화는 여전하고 사회 통합과 계층 상승의 통로만 막는 이 고루한 체제는 수술대에 올려야 합니다. 물론 수술이기에 아프고 그래서 당사자들은 반발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반발한다고 수술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의사가 아닐 것입니다.

■ 자사고 외고 학부모 당사자들에게 고향: “국민 다수의 유익과 상반된 주장은 고립을 직면할 것”

우리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교장단들 등 이해당사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나라 전체의 미래와 교육의 발전을 위해 고교를 영재고, 자사고, 외고, 과고 마이스터고, 일반고로 나누는 이 폐단을 즉각 정리해야 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도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체제는 나라 교육 전체의 퇴보 및 중학생들의 사교육 고통 가중이라는 차원은 물론이요, 자사고 재학생들에게도 해롭습니다. 대학입시에서의 승리라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고입을 위해 사교육시장에 아이들을 맡겨 그 삶이 황폐

하게 되고, 평범한 아이들과 공존하는 경험 없이 자기들만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동질 교육'을 받는 것으로는 이미 국내 기업 경쟁은 물론이요 글로벌 경쟁 속에서도 경쟁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2010년 OECD 보고서는 미래 능력으로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 공감 대화 능력, 자립심' 등을 꼽았습니다. 알량한 대학 입시 승리 하나 얻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성, 이질적인 사람들 속 공감과 소통 능력 부재 등, 아이들을 미래와 상충하는 허약한 존재로 키우는 지금 체제를 옹호한다면, 자사고 외고 재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쓰디쓴 경험을 회상합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교육부는 보수 정권의 철학과는 맞지 않게, 다소 뜬금없이 그러나 참으로 반감게도 자사고 입시 제도를 추첨제로 전환해 사교육 부담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그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공청회 날이었습니 다. 천여명의 자사고 학부모들이 공청회장에 난입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또 단상을 점거하며 행사를 원천 보이콧시켰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나라 정책이 무력화되는 것을 보는 것은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자사고 추첨제 정책이 멈춘 후, 훗날 교육부 공무원 한분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공청회 때 자사고 입시 개혁을 찬성하는 국민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교육부 편을 드는 국민들은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은 결코 그때의 폭거가 반복되는 것을 남의 일처럼 지켜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사고 학부모들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즉각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육 정책을 반대하는 일을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은 명분 없는 일입니다. 정부 공청회에 방문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을 넘어 행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폭거이며, 국민 민심을 거스른 채 정부와 대결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무릇 자기 이익을 지키고자 증오심을 동력으로 움직이는 대중운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쟁취하는 것은 오직 보편적인 국민 유익, 나라의 발전에 부합할 때만이 정당성을 얻습니다. 그런 정당성이 없는 요구는 힘을 얻을 수 없고, 결국 고립될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국민 다수와의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서 당신들보다 더 강력한 외침으로 자사고 외고 폐지 정책을 성사시킬 것입니다. 천명 이천명 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욱 거대한 합성으로 국민의 뜻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들로부터 고립되는 길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해관계를 넘어 옳은 정책을 지지하는 성숙함 대신 마지막까지 막다가 넘어지는 오류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옳지 않은 요구는 불들 가치가 없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위한 교육 변화의 길로 나서

십시오. 그 길은 결코 손해 보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 문제인 정부에 촉구함: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에 옳은 정책이 무릎을 꿇으면 촛불 민심을 저버리는 것

문제인 정부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가 초중고 통합 교육과 협업 능력 그리고 수업과 평가의 혁신이란 길로 들어섰는데, 우리만 경쟁적이고 퇴행적인 교육의 늪에 빠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사고 학부모들 등 이해집단들의 반발보다 외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요구하는 더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문제인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태를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꽃다운 생명을 지켜내고자 지금까지 발버둥 쳐 오며 지난 2016년 촛불시위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람이 들불처럼 일어났고, 그래서 결국 새로운 정권을 선택한 그 뜻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얻는 정책이면 좋으나,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옳은 정책이나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정책인지를 판단하고 그 옳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에게 권고합니다. 자사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일부 정치인들의 퇴행적 주장에 밀려 청문회에서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을 수정하라는 공세에 소극적인 입장을 개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내어주면 또 다른 하나를 내어주게 되고, 중국에는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장관 자리 하나 얻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수락한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반발에 밀려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장관으로 남을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부모들이 '고맙습니다. 김상곤 장관님' 그렇게 기억할 장관으로 남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우리는 청문회를 지켜보고, 이런 국민적 요구가 흔들릴 경우 그 다음 행동을 할 것입니다.

■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경고함: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에 소극적인 입장은 비겁한 일

교육감들에게 준엄하게 촉구합니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지지하지만 자기 시도 내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 입장을 보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현 교육감들 상당수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우리 아이들을 더 이상 입시 경쟁에 내모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부모들의 각성에 힘을 얻어 당선된 분들입니다. 그때 부모들의 슬픔과 눈물 그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이해 당사자들 시선이 두려워서 옳은 일에 침묵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포기하

고 나서 과연 마지막에 당신들이 지키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서 교육감에 다시 당선될 리도 없거나와 당선된다고 해도 그것은 개인의 권력 욕심 외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17개 전국 시도 교육감들 대부분들이 학원 휴일 휴무제 등 도입 등에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에 실망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국민들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외고 문제에 있어서 또 다시 비겁한 퇴행을 거듭한다면, 우리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감들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낙선시키는 데 온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

1.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집단들은 문제인 대통령의 자사고 외고 등의 일반고 전환 정책 흔들기를 즉각 중지하고 다수 국민들의 뜻에 따르기 바랍니다. 영재고 외고 과학고 자사고 체제 등은 퇴행적인 낡은 고교 체제로서 새로운 교육시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사고 재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롭습니다. 만일 자사고 학부모들이 이를 저지하는 투쟁을 지속한다면, 우리는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범국민 촛불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2. 문제인 정부는 자사고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 추진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후보들 대부분이 지지한 이 정책을 밀고 가야 문제인 정부가 국민의 변함없는 지지를 얻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3. 김상곤 교육부 장관 내정자 역시 청문회 때 자사고 외고 관련 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공세적 비판에 수세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를 내주면 다른 하나를 내주어야 하고, 결국 지킬 것이 하나도 없는 무력한 존재로 장관 자리에 오를 것입니다. 우리는 청문회 때 김 내정자의 정책 관련 발언을 주목하고 추후 행동을 취하겠습니다.
4.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부 공약에 대해 걸으므로는 찬성하나 자기 지역 자사고 외고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시 교육감들도 자사고 외고 정책 관련, 국민들의 여망을 받드는 노력의 대열에 서십시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학원 휴일 휴무제, 학원 심야교습금지 등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교육감들의 행태를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교육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을 엄
히 경고합니다.